

“낮은 학점, 취업 걸림돌”...대학가 ‘학점포기제’ 요구 재확산

연세대 등 총학생회 주도로 도입 촉구 고용·진학 경쟁 격화에 성적 부담 커져

취업과 진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낮은 성적을 삭제할 수 있는 ‘학점포기제’ 도입 요구가 다시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성적 정정 제도를 넘어 치열한 채용 시장에서 불리함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학점포기제 도입을 학교 측에 공식 요구했고, 일부 학교는 검토에 나섰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스텝업’은 이날 학점포기제를 상정한 이화 5대 요구안을 학교에 제출했다. 학교 측은 “요구안을 접수했으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강대 총학생회 ‘나무’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학점 포기제 도입을 위한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여 약 1900명의 서명을 모았다. 총학생회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요구서를 총장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교학협의회에서 학점포기제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 역시 올해 공약 중 하나로 학점포기제를 내세웠다. 민선식 한국

외대 총학생회장(정치외교학과 22학번)씨는 “학점포기제는 공부를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양대는 2014년 폐지했던 학점포기제를 2025학년도부터 재시행한다. 고려대는 지난해부터 필수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최대 6학점까지 포기를 허용하고 있다. 경희대, 건국대, 숙명여대, 숭실대, 동국대, 아주대, 홍익대 등도 이미 학점포기제를 운영 중이다.

“낙제 한 과목이 당락 가른다”...청년층 학점 압박 가중

학점포기제는 교과목 성적이 확정된 뒤 취득한 성적을 학생 스스로 포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학가에서 운영되다가 ‘학점 세탁’, ‘성적 인플레이션’ 논란이 일자 2014년부터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이후 취업난이 심화되자 학생들이 학점 포기제를 다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2023년 46.5%에서 2024년 46.1%로 하락했고, 지난 3월 기준으로는 44.5%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4%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같은달 기준으로는 2021년(43.3%) 이후 최저치다.

경기 위축과 기업의 채용 축소로 대학생들 사이에선 “학점 하나로 당락이 갈린다”는 위기감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하반기 취업한 고혜진(27·여)씨는 “요즘은 모든 학년, 전공목 성적을 요구하는 기업이 많다”며 “낙제를 지울 수 있다면 진로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진학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학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대학원 입시에서 핵심 평가 기준이다. 2025학년도 법학석사시험(LEET)은 약 1만 9400명이 지원해 평균 10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진학자도 2020년 24만1650명에서 2023년 25만518명으로 증가하는 등 경쟁도 치열하다.

로스쿨 재학생 정모(27)씨는 “로스쿨 진학 과정에서 학점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고 포기한 친구들을 많이 봤다”며 “학점을 짜게 주는 과나 학교일 경우 진입장벽이 훨씬 높아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점포기제를 제도입한 한양대의 로스쿨 관련 게시판에서는 “학점포기제도를 활용해도 입시 불이익이 있는지”라고 묻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좋은 일자리 적고 평가 기준은 정량”... 전문가들 구조 문제 지적



전문가들은 학점 경쟁이 치열해진 원인으로 채용 구조의 변화를 지목한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좋은 일자리는 줄고, 서류 경쟁은 심해지면서 학점이 가장 손쉽게 동원되는 선별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려는 청년층이 학점에 더 집착하게 되는 구조적 배경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상위 10~20% 일자리에만 쏠리는 구조가 청년 경쟁을 자극한다”라며 “외형적 스펙보다 동기와 경험 등 개인 서사를 평가하는 ‘좋은 채용’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점포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동국대 재학생 김채연(25·여) 씨는 “코로나 시기 이후 성적 구조가 느슨해졌는데, 학점포기제까지 확대되면 학업에 대한 긴

장감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원 진학을 앞둔 우정연(25·여)씨는 “모두가 상향 평준화되는 상황에서 학점 외 활동의 평가가 더 중요해지면 공과대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대학들도 학점포기제 도입을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이화여대 교무처장은 최근 교내 학보를 통해 “무분별한 학점포기제 도입은 학점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입 여부보다는 학생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도 “해외 대학 중 학점포기제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며 “재수강을 통해 개선하는 방식이 교육적으로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용사 전우들 곁에서 영면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용사 고(故) 요하네스 호르스트만(Johannes Horstman)씨의 안장식이 열린 지난달 30일 오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참전용사묘역에서 고인의 유해가 입장하고 있다. 이날 고인의 안장으로 유엔기념공원에는 총 14개국 2332명의 유엔군 한국전 참전용사가 잠들게 됐다.

“93% 보장” 다단계 ‘역베팅’ 피해자 180여명

다단계 스포츠 역베팅 사기 사건 피해자가 1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액은 47억을 웃돌았다.

지난달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강력범죄 수사대는 이달 스포츠 역베팅 사기 조직 ‘GM볼’ 센터장 등 여성 2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이날 기준 ‘GM볼’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186건(명) 접수된 상태다. 이 중 도민은 100명 안팎으로 파악됐다. 피해액은 총 47억으로 추산됐다.

이들 조직은 지난해 5~6월 사이 말레이시아 유명 카지노를 사칭해 GM볼이라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어 ‘역베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해외 프로축구 경기를 대상으로 결과를 맞히는 게 아닌 틀리게 빔 대로 베팅해 수익을 올리는 식이다.

이들 조직은 천안,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 ‘센터’를 차려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모집한 투자자를 관리하는 텔레그램 대

화방도 운영했다.

투자자들에게 ‘93% 확률로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라고 속이는데 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0.4~0.8%에 수익을 안겨주겠다’고 꼬드겼다.

특히 ‘주변 사람들을 모집해야만 베팅에 참여할 수 있다’ ‘00명을 모집해야 원금 보장 및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걸어 다단계 식 체제를 구축했다.

모집한 투자자 수를 기준으로 회원 등급을 9개로 나눠 관리했으며 외제차 등 고가의 경품을 지급해 회원 모집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은 범행 초기인 지난해 중순께 일부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수익금을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입소문이 나면서 규모가 커졌고 지난해 11월부터 투자금을 가로채기 시작했다.

다만 현재까지 센터장 등 관계자가 구속된 상황에서도 텔레그램 등을 통해 GM볼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투자 사기 범행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선욱기자

수사 편의·무마 대가 뇌물’ 전직 경찰관 2명

지인한테 수사편의 제공 등을 부탁받고 들 어준 뒤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장혜정 판사는 알선뇌물수수 및 요구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4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관 B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1000만원, 14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등록 렌터카 영업을 하는 지인 C씨에게 ‘경찰관을 연결해달라’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가로 2100여만원을 수수하고 유휴비 100만원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다른 지인한테 형사사건 관련 수사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연락해 향후 조사 내용이 기록

된 질문지를 유출시키는 등 수법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리스료 등 모두 19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각종 수사기관 조회 및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C씨한테 차량 할부금 대납을 약속받고 본인의 계좌로 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그는 C씨에게 지인 지명수배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해 경찰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배수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고 불신을 더욱 조장했다”며 “뇌물수수 경위, 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소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들과 뇌물 공여자간의 두터웠던 친분관계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수권기자

경찰, 오늘부터 네 달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 운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수사 기간을 통해 총 1만80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7563명을 검거하고 194명을 구속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최근 3년간 피해액은 2022년 4705억원에서 2024년 5704억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집중수사 결과 20대 피의자가 48.6%,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가 87%를 차지하는 등 범죄 진입 장벽이 낮은 특성을

보여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이 노출돼 있다는 점은 강도 높은 집중수사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부분이다.

경찰은 교통범죄 수사팀(152개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피해자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뿐 아니라 미수·유사범죄까지 확대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합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주는 계획을 지속해서 추진해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힘을 예정이다.

순해보험협회와는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버스 광고 등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수사 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면기자